

북한이탈주민

개 관

- 2010년 11월을 기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작은 군(郡) 규모의 2만명을 넘었고, 2012년 7월까지 24,010명이 입국하였음. 북한이탈주민 2만명의 시대가 주는 함의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
-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, 형태, 양상 등이 과거와 다르게 다양성을 띄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체계적·전략적인 관리·지원 System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
-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 및 제도기반 조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.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현실의 문제이면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
-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자립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 많은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임.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은 현실적인 현안이기도 하지만, 긴 안목을 갖고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 방향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. 매년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, 이들의 안정적 지원정책을 다변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
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제반 현황과 문제점 및 쟁점들은 무엇이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정착지원정책이 어떠한 방향에서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음.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들도 도출하였음
- 우리사회가 2만명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면 향후 통일시대에 2천4백만 북한



주민들의 통합은 불가능할 것임.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이 우리의 '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'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통일대비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 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. 또한 이는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일구어내는 일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임

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특성

(가) 현황

- ① '북한이탈주민'이란 "북한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"(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)
 -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에 따른 "대한민국 국민"으로 별도의 국적취득을 위한 절차가 필요 없고, 국내 입국 후 보호결정이 되면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·지원으로 조선족, 화교 등과 다름

② 입국현황

- 2000년 이전 1,400명에 불과, 2002년부터 연간 1,000명 이상, 2006년 2,000명 이상이 입국하여 2007년 1만명 돌파, 3년만인 2010년 11월에 2만명 진입, 2012. 7월 24,010명입국

(나)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

- ① 탈북동기 : 식량부족, 경제적 곤란(50.7%), 체제불만(26.2%), 가족적 이유(14.9%), 자유동경(31.2%), 돈벌기(17.7%) ⇒ 경제문제(68.4%)가 탈북의 주된 요인(2011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실태조사결과)
 - 2000년 이전과 이후 통계를 비교해 보면, 탈북원인이 체제불만, 자유동경(정치·사회적 요인) →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동반(개인적, 경제적 동기)으로 변화



※ '80년대초 구 동독인의 서독이주 동기 : 자유결핍(71%), 정치적 압력(66%), 여행 가능성 부재(56%), 불량한 급여(46%), 미래희망 부재(45%) 등 주로 정치적 문제

② 탈북특징(2012. 7 기준)

o 지역 : 함경남북, 양강도 등 국경지역 거주 비율이 84%로 대다수

- 성별 : 여성 및 가족동반 비율이 지속 증가(2011년도 여성 : 70%, 남성 30%)
(여성비율 '08년 78%, '09년 77%, '10년 76%, '11년 70%로, '12.7월 71% 감소 추세)

※ 여성이 많은 이유는 북한당국의 탈북자 처벌에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하고, 탈북과정에서 은신 도피(시골 결혼생활, 식당 등 업소 취업 용이)가 유리, 북한 내에서 가족생계의 주도적 역할 등으로 이동 용이

③ 연령별 유형(2012.2 기준) : 20~40대(약 74%)가 주축(20대 27%, 30대 31%, 40대 16%)

o 새로운 환경에 조속 적응, 탈북과정에서 은둔, 도피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 양호,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도전 세대

④ 재북 학력별 유형(2012.2 기준) : 고등중학교(70%), 전문대(9%), 대학이상(8%)

⑤ 재북 직업별 유형(2012.2 기준) : 무직·부양(50%), 노동자(38%), 관리·전문직은 각각 2%에 불과

⑥ 지역별 거주현황(2011.12 기준) : 서울(29%), 경기(27%), 인천(9%), 전체의 65%

(다)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여건상의 특성

①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근로의욕 저하

o 영양상태 악화, 복지서비스 혜택 부재 등으로 건강상태 심각한 수준으로 근로의욕이 매우 낮음



- 비경제 활동 이유 : 육체적 어려움(37.1%), 육아돌봄(24.3%), 학교수업(11.4%)

※ 남성의 경우(44.2%)

② 학력·경력 단절로 근로능력 저하

o 탈북자의 약 16%가 20세미만 청소년으로 북한의 정상적인 정규교육과정 미이수, 남한 학생과 커다란 학력 격차

o 성인의 경우, 공장 가동률 30% 미만의 열악한 경제실정으로 근무경력 등이 없어 직업기술과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근로능력 부재로 취업에 한계

③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어려움

o 획일적이고 수동적이며 타인 지향적이고 국가의존적인 사회주의 인간형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온 결과로 자율·창의·책임 등의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움

- 대체로 5·10년이 지나야 경쟁력 본질 이해 가능 언급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특성

(가) 정착지원 정책의 의의 및 추진방향

① 정착지원정책의 추진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통일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

o 향후 통일시대에 사회통합의 기여 계층으로 남북사회통합과정에서 남북주민들의 융합 및 가교역할 수행 의미

②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수용, 정착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와 보편적 기본인권문제로 국가의 당연한 의무

o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 경주



- ③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우리사회에 동화, 융화될 수 있는 정착지원으로 우리사회의 통합은 물론, 남북간 사회·주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④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우리사회의 수용 및 지원(봉사활동 등)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이는 우리사회가 선진화와 복지를 지향하는데 크게 기여

(나) 정착지원의 통일정책적 의미

-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통일대비 차원에서 통일지향적인 접근
-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은 우리사회의 수용능력과 통일시대 남북주민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
-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은 남북한 주민통합, 체제전환 교육 및 북한의 변화 등 남북사회 통합과 지원을 위한 핵심분야로 기여
-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정책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증대시키는 의미
-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안정적 정착은 통일이후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고 남한과의 통일을 지지
-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우리의 “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”이라고 강조
- 2만명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면, 향후 통일시대에 2천4백만 북한주민 통합은 불가능
- 정착지원은 미리 겪는 통일과정으로 남북통합 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대안을 모색하게 해주는 계기
- 사회문화적 통일 즉, 사람들 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한 기본

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

(가) 정착지원 단계

- 1단계 초기 입국 단계 : 보호신청 → 통보(통일부) → 임시보호조치
- 2단계 심문 조사 단계 : 관계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과 탈북동기 조사 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 거쳐 보호 여부 결정
- 3단계 사회적응 교육단계(하나원) : 심리상담 등 생활지도, 사회적응교육, 기초 직업훈련, 사회편입 및 생활안정 지원 등

※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내용

- △ 정규프로그램(12주, 420시간) :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, 우리사회 이해증진, 진로지도, 기초직업훈련, 조기정착지원
 - △ 맞춤형 자율프로그램(257시간) : 엑셀, 회계기초, 이력서 작성, 운전, 회계기초 등 취업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
- 4단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 : 하나원 퇴소 후 주택배정 받아 각 거주지의 사회안전망에 편입, 전국 30곳의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에서는 3주간 집중교육을 통해 정착지원 및 1년간 사후지원



< 정착지원 과정 >

보호요청 및 국내이송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요청시 외교부,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○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○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
합동신문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국후 국정원,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○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
보호결정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」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○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
하나원의 정착준비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응교육(12주) - 문화적 이질감 해소, 심리안정, 진로지도 상담 등 ○ 가족관계등록,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전입
거주지 보호(5년)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 안전망 편입(생계·의료급여) ○ 취업지원 : 고용지원금, 무료 직업훈련, 자격인정 등 ○ 교육지원 :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○ 보호담당관제 : 거주지·취업·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
민간참여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 지정·운영 ○ 정착도우미 :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 ○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(100여명) : 종합상담 실시 ○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'10.9.27 설립)을 통한 지원



(나) 정착지원 주요내용(자립·자활형 지원정책)

○ 초기정착 지원

-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 입소하여 민주주의·자본주의·시장경제체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하고 건강증진 및 기초직업능력을 제고토록 「사회적응교육」 실시
-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정착금 지급, 주거 알선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각종 재정·행정 지원

○ 거주지 보호

- 거주지 실정에 맞는 지역 안내 및 취업·진학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적응 프로그램 실시 등 「지역적응센터」 운영
- 거주지(지자체)·신변(경찰)·취업(노동부 고용지원센터) 보호담당관 등 각종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

○ 직업훈련·취업알선, 각종 장려금 등 취업지원

-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월 50~70만원 「고용지원금」을,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「취업장려금」 지급(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, 장기취업시 본인에 장려금 지급, 최고 2,400여만원)
-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취업홍보 및 「구인구직 만남의 날」 등 실시
- 민간단체 및 대기업과 연계한 「사회적기업」 설립,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영농·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

○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지원

-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「생계급여」 지원
- 의료급여법에 따라 「1종 의료급여」 지원



< 현행 정착지원 내용 >

구 분	항 목	내 용
정착금	기본금	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
	장려금	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, 취업장려금 등 최대 2,440만원
	가산금	노령(720만원), 장애(1급 1,540만원), 장기치료(개월×80만원) 등
주 거	주택알선	임대 아파트 알선
	주거지원금	1인 세대 기준 1,300만원
취 업	직업훈련	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약30만원 지급(고용노동부)
	고용지원금 (채용기업주에 지급)	급여의 1/2(50~70만원 한도)를 최대 3년간 지원
	취업보호담당관	전국 55개 고용센터에 지정, 취업상담·알선
	기 타	취업보호(우선구매), 영농정착지원, 특별임용 등
사회복지	생계급여	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(1인 세대 월 45만원)
	의료보호	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
	연금특례	입국 당시 50세 이상~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특례
교 육	특례 편·입학	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
	학비 지원	중·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, 사립대 50% 보조

(다) 정착지원 중점 추진현황

① 지역중심의 정착지원 서비스 확충

o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 30곳으로 확대·운영

-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지역정착을 개선
-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전국에 120명 배치, 활용(북한이탈주민출신 20%)
- 지역 중심의 정착지원 서비스 확충은 3대 보호담당관 및 3대 민간서비스 담당자(하나센터, 전문상담사, 정착도우미) 들과 연계망 구축으로 효율적 정착에 기여



② 취업지원 강화

○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한 과제

- 취업박람회, 경제인 단체와 MOU체결, 제도개선 등 추진
- 대기업과 연계, 고용창출을 위한 '사회적기업' 설립·지원
- 창업교육 및 대출지원 등으로 성공기회 마련 등

③ 민간지원 역량 강화

○ 민간차원의 지원역량을 결집, 다양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재단 출범

-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·정착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

④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

○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후원의 날 개최, 자원봉사단 출범 등 다양한 사업 추진

(라)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(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년도 생활실태조사결과)

○ 경제활동참가율은 56.5%(남 69.3, 여 52.2)로 일반국민의 61.0%보다 4.5% 낮고, 고용률은 49.7%(남 61.9, 여 45.5)로 일반국민의 58.7%보다 9% 낮고, 실업률 12.1%(남 10.6, 여 12.8)은 일반국민의 3.7% 보다 3.3배 높음(지원재단 2011. 7~8 월 조사)

-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이탈주민에 대한 편견, 주민 스스로 취업의지 부족, 열악한 건강상태, 노동강도 및 직장문화 차이, 사회보장시스템 안주경향 등

○ 특히 탈북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에 비해 취약

-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9.3%, 여성은 52.2%
- 고용률은 남성이 61.9%, 여성이 45.5%



- 실업율은 남성이 10.6%, 여성이 12.8%
- o 2011년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로 상용직 근로자가 45.4%로 가장 많은데, 이어서 일용직 32.2%, 임시직 15.2%순임
- 일자리 유형으로 상용직의 경우 장치·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9.2%, 임시직은 단순 노무자가 28.1%, 일용직은 서비스 종사자가 40.6%로 높았음.
- o 월평균 근로소득이 50만원 이하가 8.2%, 50-100만원이 25.0%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30%내외는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있음.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

(가) 정착지원 정책의 목표

- o 경제생활에 있어 안정적 정착(먹고사는 문제, 좋은 직장, 안정된 소득)이 중요 과제이고 정착지원의 목표임
- o 우리 사회의 건전한 자리매김과 생산적 기여자로 활약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함
- o 통일과정의 주도적 역할 담당하는 통일역군 역할
-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통일역량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임. 이것이 자기주도적 정착노력이며 통일역군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원천인 것임

(나) 정착지원 정책관련 쟁점

- o 지원의 방법(물고기 잡는 방법)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논의의 공감대, 정착지원 방향이 자립·자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적응능력 배양에 역점
- 일방적 수혜 지양, 자립역량 배양하는 방향에서 인센티브제도 도입



- 출발선을 맞춰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논의
 - 과도한 지원은 의존성만 증대, 자립능력 저하 유도
 - 남한주민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착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필요

- 지원기간에 관한 문제로 특별지원은 가급적 조기(거주지 보호기간 5년)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족부분은 민간의 program을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는 요구
 - 아직 부분적으로 완료되지 못함

- 이탈주민의 보호가 특별보호 아니면 일반 보호이어야 하는가 문제
 - 특별보호 및 지원은 의존성 증대로 오히려 정착을 방해,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으로 스스로 정착의지 심어주어야 한다는 주장

- ※ 맞춤형 지원 필요

- 이탈주민과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
 - 취약계층에도 정책의 우선순위 주어져야 함
 - 이탈주민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

- ※ 일반국민의 복지서비스 수준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분야에서 최소수준으로 구성
- 정착지원 정책이 통일과정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
 -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시대에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등
 - '탈북지도자 아카데미' 지원('11.4) : 통일대비 탈북자 1천명 양성 프로그램 진행



(다)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과제

① 정착지원 서비스의 내실화와 서비스 간 연계강화

○ 2010년부터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서비스가 본격 확충되었으나, 아직 내실화 단계는 아님

- 각각의 서비스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상호협력관계와 연계고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

※ 거주지 보호담당기관인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'지역협의회' 적극 활용

②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

○ 개인별 경력개발과 관리·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정착 경로를 제시, 이를 위한 지원제도를 제안

- 하나원에서부터 개인의 적성, 희망과 역량 가능성 진단하여 하나센터에서 활용하도록 긴밀히 연계

③ 성공을 위한 지원분야 다양화

- 특정한 제조업, 비정규직 집중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집약적, 전문적인 분야 적극 발굴·유도

④ 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지원역량 극대화

○ 각종 서비스지원사업 확대 / 민간-정부 가교 역할 / 이탈주민 커뮤니티 육성·지원 / 사회적 인식개선과 전사회적 지원역량 강화

⑤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본격화

○ '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정책'으로 통일역량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

- 이탈주민 소질과 능력을 잘 계발·육성함으로써 우리사회는 통일미래에 있어 분야별 사회통합 촉진 역할 담당하도록 지금부터 준비

-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각론화된 통일준비가 가능



정착지원정책의 발전방향

(가)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

○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

- 우선,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'생산적 기여자'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

※ 외국주민보다 관심이 저조한 것이 현실,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포용이 필요

- 북한에서의 경력과 노하우를 사회·문화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

※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계발할 수 있는 분야 활용(문화·예술, 통일교육 등)

- 한편, 이탈주민 스스로 자정노력도 요구됨

※ 외국인은 3D 업종 종사, 시골처녀와 결혼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각인된 반면에 이탈주민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각과 개선 노력 필요

○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문제

- 정체성 문제는 정책참여자, 일반국민,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본인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의 자존감의 근원

- 이들은 통일시대에 이뤄질 사회통합을 사전 실험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'먼저 온 통일미래'의 모습

※ 통일과정에서 통합의 대상이면서 북한 주민을 설득·화합하는데 중요역할 수행할 주체로서의 이중적 위치

※ 북한이탈주민 Community 육성, 지원·확대 등을 통한 자기주도적 정착노력 필요



○ 북한이탈주민을 진정한 이웃으로 수용 필요

-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사례 보도 등으로 취업과 사회적응에 많은 영향

※ 선정적 지적은 있으나 효과적 해결방안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

- 일부 국민들은 북한체제와 북한이탈주민을 동일시하여 혼동 경향 상존

※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의 책임인 양 소외되는 경향

- 부정적, 의구심 등 아직도 차별적인 편견 표출

※ 북한의 가족·친지를 등지고 온 불가피한 사정 이해, 진정으로 이해하는 포용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

- 북한이탈주민들이 행복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필요

※ 학교, 직장 등에서 노력이 필요(남북주민 통합모임, 통일교육 등)

※ 2등 국민 생각 갖지 않게 배려 필요, 북한이탈주민 마음 사로잡는 것이 북한주민 모두의 마음을 얻게 됨으로써 통일은 우리 앞에 올 것임

※ 북한이탈주민들도 열등감을 버리고 주인정신을 갖고, 경쟁적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

(나) 향후 정착지원정책의 발전 방향

① 「일방적·시혜적」 정착지원 → 「자립·자활」 중심의 정착지원을 추진해 왔으나,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 노력이 필요한 시점

○ 단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협조

○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구체적 노력과 사업들을 강화·병행추진이 우선 요구됨

○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다가올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을 본격적으로 각론화 하여 대비가 필요



② 또한 정부-지역사회-민간 3자의 협력노력 배가

- 정부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·보완, 북한 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의 물리적 토대 강화
 - 계속 증가일로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변화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,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
-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수용적 태도와 지원역량 확충이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느냐의 시험기준이 될 것이며, 통일시대에 있어 사회통합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임
 - 지자체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관심과 기여를 확대해야 함(지역 적응센터 관리·운영, 지역협의회 통한 제도·서비스 효율성 강화)
 - 정부,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활동범위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
- 민간의 경우, '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연대'(67개 단체, 4개 분과)의 활동은 선도적 희생적 역할, 따뜻한 관심 표명,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처하는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, 특히 법제도와 지원사업의 확충·체계화에 크게 기여
 - 그러나 분야별 수요-공급 불일치·편중, 지원 프로그램의 수준과 전문성 부족, 연차적 안정적인 사업비 운영능력 부족 등의 과제 해결해야 함
 - 또 이탈주민의 취약한 분야 중에서 정부의 역할과 차별화될 수 있는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특화해 나갈 필요
- 북한이탈주민들도 적극적인 자립·자활의지 통해 꿈을 이뤄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통일준비에 앞장서야 할 것임
 - 이러한 노력이 남북주민 화합과 통합의 진정한 모습이고 실질적인 통일역량 강화의 길



(다) 정착지원제도 및 하나원 교육관련 검토

① 정착지원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신중할 필요

- 현재의 정착지원체계는 기존의 일방적, 수혜적 지원으로부터, 2005년에 정착금 기본금을 하향하고, 조건충족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임.
- 이러한 정착지원제도는 제3국 체류 탈북자,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등의 국내 입국이 원인으로 발생,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신중할 필요

② 하나원의 맞춤형 교육 확대

- 하나원은 성별, 연령별 7개반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(남녀 성인반, 청소년반, 초등반, 유치반, 영유아반, 경로반)
- 최근 입국자의 입국동기 변화를 교육에 반영하여 재북 경력, 학력 및 우리사회에서의 희망 진로(취업, 진학 등)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

③ 사회 정착 탈북민에 대한 사후관리 확대 및 하나원 재교육 도입

- 우리사회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후관리는 여러 부처 및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나, 총괄적·집중적 관리는 한계
- 통일부(하나원)을 중심으로 사후관리 강화할 필요
- 이미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사회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취업,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원도 상당수
- 이들에 대해 북한에서의 경력, 우리사회에서의 초기 적응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을 추진할 필요

